

# 社說

##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하라

### 등록금 협상에 바란다

협상, 논의, 진통, 난항, 결렬, 집회, 투쟁, 점거, 단식, 삭발, 이번 등록금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나온 말들이다. 여러 차례의 협상과는 그 양상을 달리했다. 여러 차례의 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없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교육부의 재정생 병합제출시기를 넘겨준 지난 20일 총장과의 마라톤협상에서까지 이렇다할 뚜렷한 해결대안이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등록금협상이 이미 이루어진 이번 협상에서 과연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여야 하며, 도출해야 하는 결론은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의 등록금협상에서 학교와 학생측은 등록금 인상률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아니라 등록금 협상의 이점은 등록금 협상이 아니라.

또한 이번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부터 커다란 난점을 가지고 출발했다. 바로 학교 행정에서의 학생참여라는 명제에 대한 서로간 인식차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끓여진 피아노의 현과 같은 것이다. 서로의 줄이 끊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외친다. 서로의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탓만을 찾기 위해 협안이 되어갔다.

양측은 학사행정에서의 학생참여에 대한 자신들의 해결책이나 입장을 정하고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이외의 다른 문제들 또한 제기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등록금 협상이 아니라 이점을 달아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이점을 계속 달고 학생참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년도에 대한 후속논의에 빠지면 이번 협상이 반복될 수 있다. 어느 누가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바램일 뿐이다. 물론 논의과정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또 이번 협상은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바로 '경희의 발전'이라는 과제이다. 재단전입금의 일시적 확보는 그 의미가 없다. 재단전입금이 그 진정한 의미를 지니려면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전계획에 맞게 재단전입금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소모적인 측면에서의 재단전입금 지출을 막아야 한다. 발전을 위해 재단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이 첫 번째 시범 계획 수립에 한 부분일 수 있다. 현안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후의 문제이다. 협상의 장소에는 민중적인 발전계획이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소모적인 협상에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무익한 시간낭비를 그만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명분만을 찾으며 해매는 협상당사자의 모습은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한다.

피아노의 현을 잇고 그 다음 소리를 찾아야 한다.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공기가 되어 그 현을 따라야 한다.

## 열사의 한 서린 민주정부수립의 길

### 강경대 열사 추모1주기를 맞으며

일년 전 오늘, 모두가 경악했던 날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군 백골단의 쇄파'에 의해 '타살'이란 비극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낮에 그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전국민은 충격과 분노로 흥분, 살인장면의 형상을 높였고 급기야는 박승희, 김영균 등 뜻깊은 젊은이 자신이 분사하며 노정권의 폭력에 항거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강경대 학우가 '비밀'에 '간첩'을 '배출'한 폭악적인 진압에 의해 질식사 당했다. 또 한번 노정권의 실정에 의해 전국민에게 죄나타하게 드러났음은 우리는 분명히 상기하고자 한다. 민주정부의 한이 서린 망명동포로서 항해는 고강경대군의 광주노제에서처럼 한민 권창수씨가 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순태에 빠진 사건을 차치하더라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문은채 자식이 못다.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갔다는 강경대의 아버지를 정권세력은 기만적 공판과정을 통해 구속시켜 1년동안 차치한 감방에서 지내게 하였던 것이다.

머리를 조이리며 백배 사죄해도 부족한 한국에서 정권의 처사를 보고 국민들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정권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 어린 젊은 학생을 둘러싼 정권의 행태만 보더라도 정권의 실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일년이 지난 오늘, 지금 고강경대 열사 추모 1주기를 맞이하며 민주정부수립의지를 다시금 다짐해야 한다. 지난날 처참한 국외원수선에서 일차적으로 민중적 정권을 수립했다면 정 올해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기필코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민주정부야말로 얼마나 열렬한 이념의 목표가 아니었는가. 민주정부는 모든 이들이 땀땀하고 자유롭게 삶을 구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최소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살인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담보하는 것이요, 개인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인간의 사회를 보장하는 것이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새로운 조국건설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참평화와 광동의 세상을 이루려는 노력을 항상 견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며칠전 서충현 출법식에서 강경대 열사의 부 모님을 하늘높이 '애' 민주정부를 힘차게 불러 참가자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한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으로 전국민을 들끓게 했던 작년 5월의 투쟁을 과거 역사의 한페이지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아니라 하겠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죽은 자를 부르는 법이다. 강경대 열사는 '민주'를 부르며 '민주' 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리라. 열사는 살아있는 것이다.

지난주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강간 범죄 발생률이 세계 20개 주요국가중 세번째로 높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또한, 여기에서 "외국범죄통계"도 밝히며 강간사건이 인구 10만명당 9.8건인 우리나라와 미국의 41.2건, 스웨덴의 16.4건, 이탈리아의 1.2건, 일본의 1.3건과 비교하였다.

이 보고는 국민들에게 강간범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을 막연한 실제 현실적으로 가시화시켜준 것이었으며 또한 커다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었다.

23일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개방적인 남녀평등사상의 사회인식이 자리잡았다"고 전제하고 "성희롱의 위기상황"이며 성의 상품화와 퇴폐-향락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성윤리의 의식도 조금씩 허물어졌다"고 밝히고, 그 해결책안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건전한 성윤리관의 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한겨레 사설에서도 성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93%가 성폭력의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히고 "지속적이며 명확한 체계속에서의 성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러 매체에서 역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교육의 부재문제와 퇴폐향락적인 문화와 퇴폐업소 문제, 윤리관의 부재 문제, 특별법의 재정 문제등 모든 분야로



## 성문제에 대한 양면적 언론 보도 태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는 매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문제의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데 퇴폐적인 잡지나 출판물 또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인지한다면 신문이라는 매

체 역시 한번 유심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광고 지면을 통한 지나친 선정성 과 여성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상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에 성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 이는 무감각해지지만 많은 광고가 노출과 선정성을 자랑하고 신문의 상당부분을 장악

하고 있다. 이것은 광고 제작사의 문제를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여기에 배움을 수 없는 것이 신문지업상의 사기이다.

이전부터 해외토포픽과 국제기사는 신문의 앞다투어 여성의 반자신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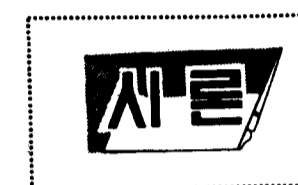
어왔다. 우세 소리지지 몰라도 여성의 속옷사건이나 외국의 포르노배우 출신 국회의원 사건을 실으면 그날의 신문판매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신문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그 사안이 무슨 나름대로의 의의나 비중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독자에게 자극적인 무엇인가를 제공하기 위해 지면에 실린다. 물론 나름대로의 상업성 역시 고려되었을 것이다.

결론만 따지면 성의 문제는 그 설득력이 없다. 성폭력이나 성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기사에 반론의 사진을 실는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신문의 지면이 이러한 배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윤리의 올바른 정립은 너무나 현저한 결여가 되어버린다. 그러한 사안도 표현이 성폭력이나 성 전면에 관한 문제를 약화시킨다고는 누구도 단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진을 실음으로써 지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환 기자)

## 오존층 파괴 인류 생존의 과제

### 몬트리올 의정서와 환경문제의 심각성



6천년전부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해온 이래 인간은 자연환경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의한 문명의 발달로 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로 산성우에 의한 피해와 기상이변, 지구 온난화, 사막화, 동식물의 감소, 오존층의 파괴 등등, 이제 는 지구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발전 정책과 인간의 수수성 결여를 들 수 있다.

그러하여 자연생태계의 소비자인 인간은 생산자, 분해자의 균형을 파괴하면서 파괴하고 있다. 20년전(1972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인간환경 회의의 '하늘인 지구'에서 부터 이번 열리게 되는 브라질 환경회의의 '우리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의 변화속에서도 지구의 환경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인류가 당장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을 100% 중단한다고 해도 오존층은 향후 10년 이상 계속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1월 1일 발효되고 동년 7월 1일을 기해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1990년 8월에 기후변화의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2천년까지는 이들의 생산과

Halon)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이라고 알려졌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 1988년 3월 연방보고서를 통해 1969년 3월 1986년까지 CFC로 인해 오존층이 2.3%나 감소되었다고 밝혔으며 전세계적인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만약 오존층이 1% 감소되면 이곳을 통과하는 자외선의 양은 2~3%가 증가하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보호막인 오존층이 대량 파괴된다는 것은 차라리 두려워할 수 없는 파멸, 핵전쟁과 같은 절망을 일으키는 것 외에 자연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남극해의 경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정서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CFC의 특성을 보면, 인화 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열안정성이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오염이 없다.

또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부식성이 없고 전조가 빠르며 선택적 용해력이 높으며 취급이 용이하고 무색·무취하다. 그리고 저장성이 뛰어나고 질식성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CFC의 용도 사용량은 1986년 기준으로 스프레이류의 전체적인 사용량이 20만톤, Fama 제제는 26만톤이며, 1987년 기준으로 냉매가 25만톤이고 solvent용은 18만톤, 소방제는 약 2만5천톤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비가입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처하고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들이 공동의 노

## CFC 할론 2천년에 생산 사용 금지돼

### 정부 민간 기업의 공동 노력 절실

우 자외선이 50% 증가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는 25~5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로인해 크릴새우가 줄어들게 되면 남극의 생태계가 파국직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인류가 당장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을 100% 중단한다고 해도 오존층은 향후 10년 이상 계속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9년 1월 1일 발효되고 동년 7월 1일을 기해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1990년 8월에 기후변화의 종류가 더욱 확대되고 2천년까지는 이들의 생산과

기준으로 연간 2만여톤의 CFC 사용량을 보이고 있으며 CFC를 사용하는 관련업체수가 1천4백여개이며 이들 산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은 약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CFC의 수요가 연간 약 25%씩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수는 1990년 7월 기준으로 60개국이며 규제대상 물질이 20개 품목(CFC 15종, Halon 3종, 기타 2종)이다.

그리고 주시할 점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의 규제사항인데 규제물질은 1990년 1월 이후에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가입국중 개발도상국은 1993년 1월 이후

한 기업의 변화는 점차 필수적으로 요철될 전망이다. 우리의 기업도 이제 환경문제에 한하여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 보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선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민간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환경상품에 마크를 부여하는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환경피해가 적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기업의 환경피해가 적은 제품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기업은 환경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새로운 이윤추구의 동기를 제공하며 기업은 환경문제를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필요요인 문제가 전지구적 차원의 인류 생존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이러

김성천 (환경학과·박사2기)

포항제철 창립24주년

##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포항제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을 기업문화로 승화시킨 포항제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항제철의 다섯가지 정신—개척, 도전, 희생, 협동, 공인정신. 이것이 연간 매출액 6조원의 국내 제1의 제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포철 특유의 기업문화를 정립하였습니다.

**창립 24년만에 세계3위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포항제철**  
 세계최고 품질의 철강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을 세계 2위 전자산업을 세계 6위 자동차산업을 세계 9위로 올려 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세계 교역량의 5배에 달하는 연간 5천만톤의 철강재를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활성화에 앞장서는 포항제철**  
 제조업은 경제의 기본입니다. 포항제철은 제조업 부문의 투자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설비 투자액 18조5천억원의 9.7%에 해당하는 1조8천억원을 투자하여 제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미래산업을 개발하는 국민기업**  
 금년 10월 조강 설비 2,100만톤의 4번째기 제조대역사를 완성하고 이동통신, 신소재,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에 진출하여 다가오는 2001년에 매출액 2백억의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